



주간 통일정세

2009-4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김정일,李大통령 방북 초청(10/18, 연합)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미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밝힘. 이 당국자는 지난 14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순방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를 들면서 김 위원장의 이 대통령 방북 초청 사실을 언급,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 같은 방북 초청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음.
-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당국자의 발언이 정확한 것인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남한과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언론보도를 지켜봐 왔고, 이명박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상기시킴. 모렐 대변인은 별도의 이메일 답변에서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했던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남북 접촉의 전망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혀 이 시점에 이 대통령 방북 초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

● 北, 핵무기 전면적이고 완전한 철폐 주장(10/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대표는 10월 12일 열린 유엔총회 제64차 회의 1위위원회 회의에서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서 군축 특히 핵군축 문제는 의연히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다”며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폐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
- 그는 미국이 최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한 데 대해 언급하고 “세계 최대 핵보유국들이 핵 군축에서 앞장서면 여러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핵보유국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깨끗이 청산하는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언급
- 북한 대표는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냉전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지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면서 “최근 조선반도에서의 사태 발전은 국제무대에서 핵 군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라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밝힘.



- **노동신문, 북남협력 위한 실천행동 필요(10/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현실은 북남협력을 위한 실천행동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실천행동으로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 그러나 지금 남쪽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저애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북과 남이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라는 실로 놀라운 망언들까지 튀어나와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
 - 신문은 “북남관계는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실천행동만이 우여곡절을 거듭하는 현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결정적 조건을 지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 노벨상 오바마, ‘변화’공약 실천해야(9/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명예로운 수상에 부끄럽지 않게 자신부터 ‘체인지(변화)’ 공약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 **노동신문, 평화협정, 가장 합리·실천적 비핵화 방도(10/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조선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과 미국간 평화협정 체결이 “조선반도(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불안정한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의 하나”라고 주장.
 - 신문은 북한 핵문제를 ‘조선반도 핵문제’로 확대규정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에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조건에 ‘세계의 비핵화’까지 포함시킴.
 - 신문은 북·미간 평화협정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의 하나”로 제시하고 “조미 사이에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조미 교전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진시킬 수 있다”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며 평화를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에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

- **노동신문,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주장(10/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화해, 협력의 실현은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추석을 계기로 열렸던 남북 이산가족 상



봉의 성과를 토대로 “금강산, 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 교류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북남 선언들에 따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적극 실현해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북)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거듭 주장, 신문은 “북과 남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하고 사회문화와 인도주의 분야 등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해 나간다면 서로의 자원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이용하여 전국적 판도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끊어진 민족의 유대를 다시 잇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

● 북, 오극렬·김경희가 뜬다(10/14, 한국일보)

- 북한의 대외적 권력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석단 서열에 최근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중앙위 경공업부장이 새로 등장했다고 한국일보가 14일 보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7월8일 김일성 사망 15주기 중앙추모대회 주석단 서열’에 따르면 오극렬은 7위, 김경희는 15위에 올랐다고 신문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권력실세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주석단 서열 명단에 들어갔음.
- 최근 주석단 서열에 따르면 올 2월 임명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도 김격식 전 총참모장을 대신해 주석단 서열에 처음 등장, 이번 주석단 서열에서 1~4위까지는 지난해 9월 서열과 똑같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의 순, 5위 전병호 국방위원과 6위 이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할 때 순위를 맞바꾸었음. 지난해 9월에는 7위였던 김격식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순위에서 빠지고, 올 1월 사망한 김익현 인민군 차수, 이종산 인민군 차수, 남승우 조총련 부의장 등이 이번 서열에서 제외됐다고 한국일보는 보도
- 이번 주석단 서열에 포함된 23명을 소속기관별로 보면 국방위원회 및 군부 8명, 조선노동당 8명, 최고인민회의 4명, 내각 1명, 기타 2명 등임.

● 노동신문, 당원 역할 강화 독려(10/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조선 노동당원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라는 장문의 ‘편집국 논설’을 통해 2012년을 목표로 한 ‘강성대국’ 건설은 “노동당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대한 임무”라며 노동당원의 역할 강화를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



- **北 함경북도 인민위원장에 한홍표 임명(10/1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함경북도 인민위원장에 한홍표(61) 함북 청진시 인민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13일 함북 김일성 혁명사적관 창립 40돌 기념보고회가 12일 열렸다고 전하면서 한홍표를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호칭
 - 한 위원장은 2002년 6월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03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에 선출됐으며 2003년부터 함북 청진시 인민위원장으로 있었음.

- **원자바오, 北,南과 관계개선 의지**
 -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 특히 최근(4~6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원 총리는 “남한과 관계개선 의지가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밝힘.

나. 경제 관련

- **北류경호텔 완공은 2012년? (10/15, BBC)**
 -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돼온 평양의 105층짜리 류경호텔이 마침내 완공될 것인가? 2008년 여름 재개된 류경호텔 건설 공사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에 맞춰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가 15일 보도
 - 평양 재단장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외벽 유리를 붙이고, 피라미드형 건물의 두 벽에 회색 콘크리트를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음.
 - 현재 류경호텔 완공 작업을 맡은 회사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 임. 이 회사는 북한에서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축, 영업할 수 있는 4억달러 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의 일환으로 류경호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오라스콤의 최고운영책임자인 할레드 비차라는 이집트 엔지니어 수 십 명과 북한 노동자 약 2천명이 류경호텔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그는 일단 건물 외장 작업을 마무리한 후 2010년 후 건물 내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경제연구, 강냉이는 ·쌀겨에서 기름짜내자(경제연구, 2009년 3호)**
 - ‘경제연구’ 2009년 3호는 ‘기름 문제를 푸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먹는 기름과 공업용 기름 분



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기름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

- 잡지는 식용유 확보책과 관련, “먹는 기름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도는 강냉이눈을 갈라내어 기름을 짜는 것”이라며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강냉이눈과 쌀겨에서 기름을 뽑고, 거기에서 나오는 강냉이눈박과 쌀겨박으로 집짐승 먹이를 해결하면 많은 고기를 얻게 된다”고 설명

● 압록강대교 2010년 8월 착공 가능(10/15, 단등신문)

- 단등신문은 15일 단등시 관계자를 인용 “양측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8월께 압록강 대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 이 관계자는 “압록강 대교 건설에 대한 양측의 합의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압록강 대교 건설에 적극적인 만큼 착공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중국은 2007년 초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僞)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노후한 압록강 철교를 대체할 대교 신설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2년여 간 애를 태워왔음. 중국은 압록강 대교가 신설되면 북중 교역량 확대는 물론 북한이 대외 개방에 나설 경우 풍부한 지하자원 확보에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압록강 대교 신설에 적극적이었음.
- 중국은 신설되는 압록강 대교 건설비 10억 위안(약 1천700억 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민주조선, “아글타글 아껴야”(10/7,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10·11월 ‘연료, 동력 절약 월간’을 맞아 “연료, 동력을 절약하며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문, “100일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를 보장하려면 생산을 늘이는 것과 함께 “있는 연료와 동력을 절약하며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강조

다. 군사 관련

● 北 대화하면서도 또 무력 협박(10/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해군사령부는 15일 “남측 해군 함정들이 12일 하루 동안에만 정상적인 고기잡이를 하는 우리(북한) 어선들이 저들(남한)의 수역을 침입했다고 하면서 10차에 걸쳐 16척의 전투함을 우리측(북측) 영해에 침입시켰다”고 주장
- 북한 해군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에서 “(남한 함정들이) 어선 단속을 구실로 불법의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남조선 군(軍)당국의 처사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



- **北비변사등록 번역본, 2011년 출판(10/15,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조선시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의 번역을 마치고 2011년 출판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5일 보도
 - 신문은 1998년 시작된 번역사업이 총 150책(권)으로 전부 완료됐다고 하며 “11년간에 걸치는 방대한 번역작업에는 30~40대의 새 세대 젊은 학자들이 참가”해 ‘비변사등록’ 원문 2만7천 쪽을 번역한 원고가 30만매에 이른다고 소개

- **北, 현재 신종플루 감염자 없다(10/14, 조선일보)**
 - 북한에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현재 한명도 없다고 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박명수 서기장(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이 밝힘. 조선신보 14일자에 실린 인터뷰에서 주변 국가에선 신종플루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유독 북한만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환자가 있는데도 없다고 우리가 숨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강조
 - 그는 또 “국제기구의 협조도 받으면서 많은 양의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다”며 “현재 주변 나라들에서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도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 그는 “치료약제의 국산화를 위한 준비도 본격화”돼 의과학원에서 치료약제의 시험생산을 이미 끝냈으며, “예방약제,ワクチン(백신)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소개
 - 북한의 방역대책과 관련, 그는 “국내 감염보다도 외부로부터의 비루스(바이러스) 반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양비행장, 신의주, 두만강의 국경역을 비롯한 “출입국의 모든 갑문에서 검사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美국방부, 北 ‘독사’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10/18, 연합)**
 -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북한의 KN-02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일명 독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고 밝힘.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독사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
 -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도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국



제사회의 컨센서스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언급, 이 당국자는 특히 “미국은 주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에는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들을 위해 ‘확장억지력’ 등 방위무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방부의 이 같은 판단은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미 국무부의 입장과 큰 온도차를 보이는 것임.
-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유엔 결의 위반 여부는 미사일 사거리 등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무부의 이런 반응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잉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해석되고 있음.

● 美당국자, 전작권 전환, 2012년 상황보야(10/18, 연합)

-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전 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기와 관련, 원만한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최종 전환결정은) 2012년의 상황이 어떻게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전작권 합의 내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이전에 (한반도의) 정치적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명백한 결정을 하도록 매우 분명하게 돼 있다”고 밝힘.

● 美, 북미 대화 제3국 개최 요구(10/18, 요미우리신문)

- 버락 오바마 미국 정권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양자 대화와 관련해 장소는 제3국에서, 참석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으로 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
-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를 허가, 그의 방미 기간 성 김 미 북핵 특사와 접촉하도록 할 방침임.
- 북미 협상 소식통과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뉴욕에 있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 등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가 참가하는 양자 대화 개최지로 중국 베이징(北京)이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 베이징에서 개최되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
- 미국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강석주 부상을 협상 대표로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언,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사전에 약속할 것도 요구하는 등 북미 대화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란 인상을 피하려 하고 있



으며, 대화 시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되는 내달 중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미국무부, 北리근에 비자발급 결정(10/17, 연합)**

- 미국 국무부는 10월 말 방미를 추진 중인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에게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이 16일(현지시각) 밝힘.
- 리 국장은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방부, 北미사일 발사 도움 안돼(10/15, 연합)**

- 미국 국방부의 제프 모렐 대변인은 14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 모렐 대변인은 오는 18~23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익하고, (정세를)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국과 주변국이 용인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

● **美, 북미대화, 6자회담 내에서 이뤄져야(10/14, 연합)**

- 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는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중국을 방문 중인 캠벨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이 북한에 미국과의 독립적인 대화는 ‘카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힘.

● **북 美그레이엄 목사, 고위관리 면담(10/14, 조선중앙통신; 10/13, 조선중앙방송)**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미국의 저명한 부흥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자 구호단체 ‘사마리탄즈 퍼스’의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만나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박 외무상이 그레이엄 목사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면담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음.
- 그레이엄 목사는 평양에 새로 건설하는 치과병원에 19만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와 물품을 전달했으며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진행중인 북한 병원에 대한 전력 지원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블룸 대변인은 소개
- 그레이엄 목사는 13일 전용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며 도착 직후 “미-조(북) 사이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선에 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13일 보도



● **힐러리, 대북 제재 완화 의사 전혀 없다(10/13,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Clinton) 미 국무장관은 13일 핵 문제와 관련, 대북(對北) 제재를 완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힘. 북한을 6자 회담 협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됐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완화를 제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언급
- 그는 또 “북한이 (스스로) 6자회담에 돌아온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대화) 목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종식(complete end)이어야 한다”고 언급

나. 북·일 관계

● **日, 北납치문제 다시 점화 (10/15, 니혼게이지사이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협상이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자 미국 등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요청키로 했음.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최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북미 양자 대화는 물론이고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6자회담 참가 의사를 밝힌 만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미국을 통해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요청할 방침임.

다. 기타외교 관계

● **케냐, 北과 ‘평화적 핵기술 교류’ 관심표명(10/16, 자유아시아방송)**

- 케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내세워 북한의 핵기술에 관심을 표명, 모세스 웨탕굴라 케냐 외무장관은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케냐 정부는 북한이 핵을 군사적 용도가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케냐 신문 ‘더 스탠더드’를 인용해 보도
- 웨탕굴라 장관은 또 “케냐도 경제와 에너지 개발을 위한 평화적인 핵기술의 사용을 원하며 북한뿐 아니라 교류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이 기술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보도
- 북한의 박현재 우간다 주재대사는 10월 12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음와이 키바키 케냐 대통령에게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외교 증서를 전달했다고 ‘더 스탠더드’는 보도, 비동맹 가운데 온건 국가로 분류되는 케냐는 지난 1975년 5월 12일 북한과 수교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서도 북한의 상주공관 개설을 허락하지 않고 북한 공식대표단의 접수를 거부해 왔음.



일정책협력관)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측은 이산가족 추가상봉 등에 있어 남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뒤 (후속 논의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별도로 요청을 했다”고 전언, 김 위원은 “북측은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품목과 수량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지원 요청에 대한 정부 방침에 언급, “일정한 규모의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은 조건없이 하고 대규모 지원은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언급

● 남북 기독교계, 내주 홍콩서 접촉(10/16, 연합)

- 남과 북의 기독교인들이 내주 홍콩에서 만나 상호 교류확대와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을 논의,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세계교회협의회(WCC)가 21~23일 홍콩 추엔완에서 개최하는 ‘도산소 회의 25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협의회’에 남한 대표단은 물론 북한 대표단도 참석, 행사에는 남측에서 각 교단 대표와 권오성 NCCK 총무를 비롯해 50여명이, 북측에서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참석할 예정

● 정부, 北 ‘유감’표명 사과로 공식 인정

- 북한이 14일 임진강 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에게 조의(弔意)를 전했고,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입장을 “사과로 본다”고 했음.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남북경협협회사무소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음.
- 북측은 또 무단 방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소개, 북측은 ‘더 큰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댐 붕괴 등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설명

● 미사일 발사에도 남북 실무접촉 재개(10/14, 연합)

- 남북은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각각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남북 불교도, 금강산 신계사서 통일기원 합동법회(10/13,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가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면서 “미국은 모스크바 회담에서 러시아 측에 이란과 관련한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힘.

- 이와 관련, 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나 상당한 진전이 없으면 추가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함. 라브로프 장관은 “현 상황에서 (이란) 제재나 압박 위협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러시아는 제재에 “매우 유보적”이라고 말함.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양국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전했고, 클린턴 장관 역시 러시아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외교적인 노력에 “매우 협조적”이라고 덧붙였다.

● “北·이란 핵무기, 서방 전력망 마비 능력”(10/14)

- 북한과 이란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서방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과학자들은 미사일에 장착돼 발사된 핵폭탄이 대기권 밖에서 폭발할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음. 과학자들은 지난 12일 영국 의회 국방특별위원회에서 중거리 미사일에 발사된 핵탄두가 지구로부터 20 마일(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하면 영국 전역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음.
- 미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 과학자들은 높은 고도의 전자기 펄스(HEMP)가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음. 미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 중인 ‘국제 EMP 협회’ 아비 슈너르 대표는 전력망은 물론 상수도, 전화도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그는 미국의 경우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이미 착수했지만 영국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전력망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그는 마비된 전력망 등을 복구하는데 4-8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음.
- 과학자들은 또 국방 정책입안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위협을 꼽았음. 특히 북한의 경우 이미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태평양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고 BBC는 지적했음.

● “北-이란 핵 확산위협 美에 중대 도전”(10/13)

- 데이비드 고펜트 미국 국가정보국(DNI) 부국장 후보자는 13일 미국이 직면한 안보적 도전과제의 하나로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위협을 꼽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보수집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펜트 후보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을 통해 “무모한 정권과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WMD) 획득을 방지하는 일은 도전과제”라며 “최근 이란 콰지야에서 발견된 우라늄농축시설은 효율적인 반(反)확산의 전제조



건으로 통합된 정보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 고퍼트 후보자는 특히 “이란과 북한은 (WMD의) 추가적인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높다”면서 “보다 더 광범위한 도전과제는 핵분열성 물질의 이전, 불법 무기 생산, WMD 물자 및 기술의 거래 등을 적발해 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 이어 그는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보과제는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위협으로부터 물샷틈없는 경계를 하는 것”이라며 “현재 가장 심각한 위협은 전략적 목적과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갖춘 테러리스트 집단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알카에다가 제일 위험한 존재”라고 평가했다.

● 中 “北 미사일, 긴장완화에 영향없다”(10/13)

- 중국은 북한이 12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언론 보도를 주의깊게 살펴봤고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란 사실에도 주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마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北, KN-02 단거리미사일 5발 발사(10/12)

- 북한이 12일 오전과 오후 동해안에서 사거리 120km의 KN-02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동해안에서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모두 5발 발사했다”면서 “오전에 2발, 오후에 3발을 각각 발사했다”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발사 장소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이남에서 강원도 원산시 사이의 동해안 일대로 안다”며 “KN-02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됐기 때문에 발사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KN-02 미사일은 옛 소련의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SS-21을 개량한 것으로 고체연료를 사용, 5분내 신속 발사가 가능함. 원형공산오차는 100m 내외이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신속히 발사할 수 있어 우리 군에 위협이 됨.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7년 7월 관훈클럽 초청연설을 통해 KN-02 미사일과 관련, “이 첨단 단거리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으며 고체미사일로 현대화됐고 신속한 발사와 이동이 쉽다”고 평가한 바 있음. 북한은 현재 실전 배치 중인 이 단거리 미사일을 2004년 1발, 2005년 5발, 2006년과 2007년 각각 3발 등 모두 12발 시험 발사했으며 2007년 4월 인민군 창건 기념일 군사행진 때 공개



했음. 북한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동·서해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선박 항해금지지역을 선포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번 발사가 통상적인 군사훈련 차원일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관심을 끌기 위한 ‘무력시위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음. 군 관계자는 “KN-02 미사일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북한이 지속적인 성능개량 차원에서 시험발사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클린턴 “북한 핵 不容 목표 변함없어”(10/1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연쇄 발사와 관련,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을 순방 중인 클린턴 장관은 이날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핵 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검증가능한 방식을 통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했음.
- 클린턴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공조를 이루고 있고,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모든 국가안보상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난관을 뚫고, 도전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확고하게 전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말했다.

● 러시아 “北 6자회담 재개 의향 활용해야”(10/12)

- 러시아 외무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의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한 6자회담 재개 용의 표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논평에서 “북핵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러시아의 입장에 한국과 일본, 중국이 뜻을 같이해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6자회담을 다시 열려는 북한 측의 자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장국인 중국의 초청을 받는 대로 차기 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미국방부 “北 ‘독사’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10/18)

-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북한의 KN-02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일명 독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독사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도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특히 “미국은 주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에는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들을 위해 ‘확장억지력’ 등 방위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북미 대화 제3국 개최 요구” <요미우리>(10/18)

- 버락 오바마 미국 정권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양자 대화와 관련해 장소는 제3국에서, 참석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으로 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전했다.
-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를 허가, 그의 방미 기간 성 김 미 북핵 특사와 접촉하도록 할 방침임.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를 어디까지나 보즈워스 대표에 의한 협상의 사전 절충으로 보고 있음.
- 북미 협상 소식통과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뉴욕에 있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 등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가 참가하는 양자 대화 개최지로 중국 베이징(北京)이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음. 베이징에서 개최되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함. 미국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강석주 부상을 협상 대표로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사전에 약속할 것도 요구하는 등 북미 대화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인간 인상을 피하려 하고 있으며, 대화 시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되는 내달 중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세계교회협의회 대표단, 평양 도착(10/17)

-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표단이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초청으로 17일 방북했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뮤얼 코비아 총무를 비롯한 WCC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만 짧게 전했다. WCC 대표단은 오는 20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북한 교회와 당국 관계자를 만나는 한편 코비아 총무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설교할 예정이다.
- WCC측은 방북에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교회가 사회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여해왔고 WCC는 지난 수년간 이를 지원해 왔다”고 말해 이번 방북이 대북지원을 위한 것임을 내비쳤음. WCC측은 특히 이번 방북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한편 외교적 협상의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에 이뤄진다”고 말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측면도 있음을 강조했다. WCC는 방북을 마치고 오는 21-23일 홍콩 추엔완에서 ‘도잔소 회의 25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협의회’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는 남북 교회 대표단도 참석함. 이 행사는 WCC가 1984년 일본 도쿄 인근 도잔소에서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남북 기독교 관계자들이 처음 만난 이후 양측의 교류가 이어져 오는 것을 기념해 열림.

● 美국무부, 北 리근 국장 방미 허가(10/17)

- 미국 국무부가 이달 말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포럼 참석차 방미를 추진해온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에게 비자를 발급키로 해, 북미 당국 간 접촉이 성사될지 주목됨. 미국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리근 대사(ambassador)와 그의 대표단이 10월 말 미국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앞서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이날 AP통신에 미 국무부의 비자 승인을 확인한 바 있으며, 워싱턴 소식통도 “오는 26~27일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동북아 협력대화(NEACD)에 참석을 신청한 리근 국장의 비자를 미국이 허가했으며, 리 국장은 회의 후 뉴욕도 들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등 북미 양자대화 여부가 북핵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미 국무부가 6자회담의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 국장의 방미를 허용함에 따라 이번 방미길에 리 국장과 성 김 미국 측 6자회담 대표의 비공식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리 국장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와 핵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AP통신에 전했다.
- 리 국장은 NEACD 회의에 참석한 후 오는 30일 뉴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공동주최로 북한문제 전문가,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리 국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뉴욕에서 열린 NCAFP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음. NEACD 회의는 미 캘리포니아대학 산하 '세계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6자 회담 참가국 외교·국방부 관리와 학자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다자간 포럼임.

● “美 NGO, 방북·대북지원 활발”<VOA>(10/17)

- 미국 비정부기구(NGO)들의 북한방문과 대북지원 물자반출이 미국 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17일 미국내 대북 지원단체들이 최근 북한을 다녀오거나 방북을 준비하는 등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방송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에 본부가 있는 샘 의료복지재단은 이달말부터 약 1주일간 방북, 지원사업 현장점검과 의약품 지원은 물론 주민들에 대한 진료활동도 벌임.
- 40여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에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단은 의료봉사와 함께 청진기, 혈압측정기, 붕대 등 기초 의료장비를 담은 왕진가방 3천 개를 북한 진료소에 전달하는 한편 다음달 2일 평양에서 열리는 ‘사랑의 영양버터 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영양버터는 콩과 우유, 비타민 등을 혼합해 만든 영양식으로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5살 이하 영양 결핍아동에게 지급됨.
-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도 이달말 의료지원 사업과 관련해 방북할 계획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북한에서 국립결핵표준연구소 증축 사업을 진행 중임.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구호단체 ‘사마리탄즈 퍼스’의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15일까지 사흘간 직접 방북, 의료장비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박의춘 외무상 등 북한 고위간부들을 만났음.
-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월드비전’도 지난달 초 방북, 밀가루와 콩, 수도사업에 필요한 물자 등을 지원했음. 이밖에 북한내 결핵퇴치 사업과 미국내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진벨 재단도 다음달 방북을 계획중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 “美 개최 국제마술사회의에 北마술사 초청”(10/15)

- 미국인 마술사가 북한 마술사들의 내년 7월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제26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했던 마술사인 데일 셀워크 시트러스대학 영문학 교수는 내년 7월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국제마술사협회(International Brotherhood of Magician) 연례회의에 적어도 2명의 북한 마술사를 초청하기 위



해 미국 정부에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밝혔음.

- 1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는 국제미술사협회 연례회의에 북한 미술사들이 참석하게 되면 “서방세계 미술사들이 대부분 경험하지 못했던 북한 미술을 소개하고 북한 미술사들과 토론회를 열어 미술기법과 경험을 공유하려고 한다”며 “북한 방문을 통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곳에 대해 인간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북한 미술사들도 미국에 와서 이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미국방부 “北미사일 발사 도움 안돼”(10/15)

- 미국 국방부의 제프 모렐 대변인은 14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음. 모렐 대변인은 오는 18~23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익하고, (정세를)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국과 주변국이 용인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음. 게이츠 장관은 21~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할 예정임.
- 모렐 대변인은 게이츠 장관이 방한 기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또 게이츠 장관이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합의한 주일 미군기지 문제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한 급유지원 활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음.
- 모렐 대변인은 “(미.일) 양국과 장기적인 관계, 지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이들 합의가 매우 복잡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음.

● “미국무부, 보즈워스 방북 논란중” <美전문가>(10/15)

- 미국 국무부 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 신중론과 실행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전함. 클링너 연구원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주 국무부 관리들을 만났다고 밝히면서 “국무부 내에서는 현재 보즈워스 대표를 평양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에 관해 좀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전에는 방북은 불가하다는 견해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고 말함.
- 이러한 견해차의 배경으로 그는 “중국이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 방문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은 당초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설명했는데 이후 다소 모호한 발표를 내놔서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방북 결과를 부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함.



-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도 “북한이 원자바오 총리에게 밝힌 내용은 미국이 설정한 ‘북·미 양자회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한 것은 ‘북·미 회담을 통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한다면 다자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 앞서 사전 실무 접촉을 갖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닉시 박사는 말하고 “양측이 실무접촉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일정과 의제 등에 사전 합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적다”고 덧붙였음.

● 캠벨 “북미대화, 6자회담 내에서 이뤄져야”(10/14)

- 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미 간 직접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중국을 방문 중인 캠벨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 관리들이 지난달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미 대화는 6자회담 틀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그는 또 “북한과 외교는 매우 힘들고 때로는 상호작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북한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지 명확하지 않아 “그것이 진짜인지 판단하고 조사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어 6자회담 틀은 필수적인 것이며 그 안에서 양자 간, 삼자 간 대화, 또는 다른 형태의 대화도 가능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 정부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함.
- 캠벨 차관보는 또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미국은 “신속히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양자 접촉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힘. 그는 이어 중국과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접촉 확대는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미얀마, 이란 문제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며 금융과 경제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이 양국의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음.

● 北박의춘, 방북 美그레이엄 목사 면담(10/14)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미국의 저명한 부흥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자 구호단체 ‘사마리탄즈 퍼스’의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만나 환담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중앙통신은 박 외무상이 그레이엄 목사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면담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이에 앞서 사마리탄즈 퍼스의 제러미 블럼 대변인은 방북한 그레이엄



목사가 북한의 고위 관리를 만나고 대북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함. 그레이엄 목사는 평양에 새로 건설하는 치과병원에 19만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와 물품을 전달했으며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진행중인 북한 병원에 대한 전력 지원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블럼 대변인은 말함.

- 그레이엄 목사는 13일 전용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며 도착 직후 “미·조(북) 사이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선에 왔다”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3일 전함.

● <美, ‘김정일 언급’ 긍정평가 전환?>(10/13)

- 미국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용의를 시사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음. 미 국무부가 13일 뒤늦게 전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지난 11일 도쿄 나리타 공항 기자회견 문답 내용에 따르면 캠벨 차관보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 시사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더 많은 자세한 것을 알아봐야 하겠지만 북한 지도부가 본질적으로는 6자회담 틀에 복귀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의 일부를 준수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말함. 이런 발언은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던 미국의 기존 입장보다 훨씬 긍정적인 입장임.
- 캠벨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명확히 6자회담 복귀를 확인하고 기존의 비핵화 합의 일부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는지 아니면 자신의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그런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미국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중국을 통해 전해진 뒤 “좀 더 알아봐야 한다”는 첫 반응을 보인 뒤 지난 7일 “북한이 최근 수주, 수개월간 했던 것과는 다른 언급”(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이라고 다소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상황 진전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
- 캠벨 차관보는 이어 “미국, 일본, 한국, 중국간에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수차례 밝힌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힘. 일본, 중국 방문에 나선 캠벨 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기 전에 나온 것임. 캠벨 차관보는 또 북·미간 양자대화를 언제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대북) 접근에 있어서 (파트너들과의) 협의와 큰 인내, 신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구체적 행동 변화 없이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함. 러시아를 방문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



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완화를 제외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힘.

다. 중·북 관계

● “원자바오 방북 때 대규모 대북사업 보류”(10/17)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달 초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전에 준비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 사업에 대한 합의 문서 체결을 보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음. 신문은 베이징에 있는 북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 “이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것 같다”며 “대신 중국은 2천100만달러 상당의 식량 무상원조만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5일 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대미 관계 개선이 6자회담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이처럼 중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북한 측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중국 측은 “종전 태도와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에 준비한 사업 합의 체결을 일단 중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북중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예정했던 사업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단독 또는 합병 방식으로 탄광, 금속 광산을 개발하는 것과 공장 및 발전소 건설, 도로 등 인프라 정비 등이 포함돼 있음.

● “압록강대교 내년 8월 착공 가능”(10/15)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압록강 대교가 이르면 내년 8월께 착공될 것으로 보임. 단둥신문은 15일 단둥시 관계자를 인용 “양측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8월께 압록강 대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이 관계자는 “압록강 대교 건설에 대한 양측의 합의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압록강 대교 건설에 적극적인 만큼 착공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중국은 지난 4일 원 총리의 방북 때 압록강 대교를 신설키로 북한 측과 합의했음. 중국은 2007년 초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僞)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노후한 압록강 철교를 대체할 대교 신설을 제의했으나 북한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2년여 간 애를 태워왔음. 중국은 압록강 대교가 신설되면 북중 교역량 확대는 물론 북한이 대외 개방에 나설 경우 풍부한 지하자원 확보에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압록강 대교 신설에 적극적이었음. 중국은 신설되는 압록강 대교 건설비 10억 위안(약 1천700억 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자바오 방북, 北 차세대에 투자”(10/14)

- 중국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최근 방북을 계기로 대북 원조를 약속한 것처럼 북한을 ‘구제’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오히려 6자회담에 참가하는 나머지 5개국의 분열을 노릴 수 있다고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 박사가 14일 주장함. 존 박 박사는 이날 한 미경제연구소(KEI)와 USIP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한국, 일본 등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원 총리의 최근 방북 의미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북·중이 상호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원 총리의 방북은 북한 노동당 차세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성격이 있다”고 분석함. 그는 특히 이번 원 총리 방북에서는 6자회담과 비핵화라는 명제를 뛰어넘어 북·중간 통상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강조함.
-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선거과정에서 했던 정치적인 레토릭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실수”라며 “김 위원장은 북·미 직접 대화로 이어졌던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2차 핵실험 후)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여긴 것 같다”고 진단함.

● 中 “北 미사일, 긴장완화에 영향없다”(10/13)

- 중국은 북한이 12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힘.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언론 보도를 주의깊게 살펴봤고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란 사실에도 주목했다”면서 이같이 말함.
- 마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中 백두산 관광도로 개통..1일관광 가능(10/13)

- 백두산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전 구간이 개통돼 백두산 1일 관광이 가능해짐. 백두산의 주요 관광지 30여 곳을 연결하는 관광도로 전 구간이 완공돼 지난 11일 개통식을 가졌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함. 총 길이 177km에 폭 10m인 이 도로는 백두산 자연보호구 내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에서 시작, 백두산의 서, 남, 북쪽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천지와 폭포, 협곡, 온천은 물론 백두산의 서쪽과 남쪽, 북쪽 정상이 모두 이 관광도로로 연결돼 하루 동안 백두산의 모든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게 됐음. 지금까지는 북쪽 코스나 서쪽 코스 등을 택해 백두산 정상에 올라야 했기 때문에 백두산 내 관광지를 모두 살펴보려면 2-3일이 소요됨. 중국은 다롄(大連)의 완다(萬達) 그룹 등 중국의 4대 민간기업이 2012년까지 200억 위안(3조6천억원)을 들여 30km² 규모에 다양한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백두산 국제여행개발구를 건설키로 하는 등 최근 들어 백두산 관광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 北 납치문제 재점화(10/15)

- 일본 정부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협상이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자 미국 등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요청키로 함. 1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미대화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납치 문제 진전을 조건으로 북일 간 대화 재개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의 태도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
-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5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음. 그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회담할 예정임.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재조사는 지난 2008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 당시 북미 간 실무급 협상에서 합의한 것으로, 당시 합의는 북한이 같은 해 가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게 돼 있었음.
- 그러나 지난해 9월 후쿠다 당시 총리가 갑자기 사임한 이후 북한은 “새 정권의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연기한다”고 통보했고, 이어 출범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정권에서는 양측간 추가 논의가 중단됐음. 일본 정부는 북한이 최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북미 양자 대화는 물론이고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6자회담 참가 의사를 밝힌 만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미국을 통해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요청할 방침임.
- 앞서 일본 정부는 최근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납치문제 진전을 위해 그동안 전 각료가 참가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관방장관과 외상, 납치문제담당상 등 4명의 각료가 이끄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체제 정비에도 나섰다.

● 日, 북한 화물검사법안 제정 보류(10/15)

-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 실행을 위해 검토해 온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의 근거가 되는 법안 제정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전함. 일본 정



부는 당초 오는 23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북한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공동 여당인 사민당이 이에 반대하는데다 북한이 최근 북미대화 및 6자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만큼 일단 북한을 둘러싼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안 제정 여부를 검토기로 함.

- 그러나 제1야당인 자민당은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제정을 보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라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자민당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항공기가 수출금지 물품을 탑재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은 또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때는 자위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함. 민주당도 이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참의원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당시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국회 심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 이후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북한에 대해 화물검사를 포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기하는 동시에 법안의 조기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마. 러·북 관계

● “러, 北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당황”(10/12)

- 러시아 정부가 12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당황하고 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음. 이 소식통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 핵 해결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지금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음.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음.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 해결과 관련, 6자회담 재개가 우선순위라는 태도를 취해 왔음.

바. 기타

● 케냐, 北과 ‘평화적 핵기술 교류’ 관심표명(10/16)

- 케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내세워 북한의 핵기술에 관심을 표명해 주목됨. 모세스 웨탕굴라 케냐 외무장관은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케냐 정부는 북한이 핵을 군사적 용도가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케냐 신문 ‘더 스탠더드’를 인용해 보도함.
- 웨탕굴라 장관은 또 “케냐도 경제와 에너지 개발을 위한 평화적인 핵기술의 사용을 원하며 북한뿐 아니라 교류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당국자 “전작권 전환, 2012년 상황보야”(10/18)

-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기와 관련, 원만한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최종 전환결정은) 2012년의 상황이 어떻게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이 당국자는 “전작권 합의 내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이전에 (한반도의) 정치적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명백한 결정을 하도록 매우 분명하게 돼 있다”고 밝혀 전작권 전환시점의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치·안보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 미국 군당국자들이 지금까지 특별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2년에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당국자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임. 미국의 이런 입장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가 거론되지 않아 일각에서 전작권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던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임.
- 이 대통령도 귀국후 정치권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 “(한미) 두 나라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면 동맹국으로서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靑 “美측 ‘남북정상회담 발언’은 오해”(10/18)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했다는 미국측의 발언과 관련, “정보 공유 차원에서 미 행정부 쪽에 전달했는데 미 내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음.
-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 대통령과 원자 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한중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 8월 조문사절단을 보냈을 때 이 대통령 면담에서도 비슷한 뜻을 전했고, 그동안 여러 경로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만남을 위한 만남은 안 된다. 정략적, 정치적, 전술적 고려를 깔고 진정성 없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왔다”고 밝혔음.



- 이 수석은 “최소한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관한 한, 이같이 일관된 원칙과 태도에 입각해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면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열린 자세로 대응하되, 원칙에 어긋나거나 정략적 계산을 갖고 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 美당국자 “김정일,李大통령 방북 초청”(10/1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미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14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순방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를 들면서 김 위원장의 이 대통령 방북 초청 사실을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 같은 방북 초청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 한국 정부는 이와관련, “미국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 미 당국자는 게이츠 장관의 순방계획을 설명하면서 “북한문제와 관련해 다음 단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아주 최근이야 북한이 도발국면(provocation phase)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도발)이 우리 행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일어난다고들 한다”면서 “이제 (북한의) 그런 활동은 끝나고 우리는 갑자기 유화국면(charm phase)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 이어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으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평양을 갔다”며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당국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남한과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언론보도를 지켜봐 왔고, 이명박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상기시켰다.
- 또한 모렐 대변인은 별도의 이메일 답변에서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했던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남-북 접촉의 전망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혀 이 시점에 이 대통령 방북 초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한편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유화적인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은 검증 가능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완료하는 것이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지만, 이는 동맹의 기초 위에서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적 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이런 원칙을)



비켜나 독자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맹 및 국제적 노력과 더불어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 그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으나 우리는 결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점을 동맹들에 재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게이츠 美 국방, 한국·일본 순방길 올라(10/18)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낮 워싱턴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 하와이,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순방길에 올랐다. 게이츠 장관은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 한·미간 군사협력 강화방안,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등에 관해 김태영 국방장관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게이츠 장관은 특히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선포한 ‘동맹미래비전’에 명시된 ‘확장 억지력’ 등 군사분야의 협력·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장관은 방한기간 정운찬 총리를 예방하고, 주한 미군 및 한국군 병사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게이츠 장관의 이번 방한은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및 양국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게이츠 장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 민주당 새 정부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오키다가쓰야(岡田克也) 외상 등과 개별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현안 및 미·일동맹의 변환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의 일본방문에서는 오키나와(沖繩)현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아프가니스탄 연합군에 대한 일본의 인도양 급유중단 계획 등 미·일 최대 안보현안도 다뤄질 것이라고 미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 게이츠 장관은 22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아프가니스탄전 수행과 관련한 협력문제 등을 논의한 뒤 귀국할 계획임. 앞서 게이츠 장관은 19일 이번 순방의 첫 방문지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40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하는 티머시 키팅 태평양군 사령관 전역식 및 로버트 윌러드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후임 태평양군 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함.

● 부시 “한반도 평화정착, 6자회담이 최선”(10/14)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14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다자외교로, 6자회담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힘.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0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이슈가 6자회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그러한 해결에는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동북아에서 양자·다자적인 미국의 개입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부시 전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위기와 관련, “금융 시스템에서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자유 경제와 자유 시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힘. 그는 “정부의 개입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유무역이라고 믿는다”면서 “미국 의회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비준해야 하며 아태지역의 자유무역지대에 찬성한다”고 말함.
- 부시 전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중심은 이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갔다”면서 “G8(주요 8개국)을 G20(주요 20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며 중국, 인도, 한국, 오스트레일리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함.

● 게이츠 美국방 SCM 참석차 21일 방한(10/12)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짐.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기간 SCM 참석 외에도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한을 앞두고 주요 국방현안을 사전 협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음.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게이츠 국방장관이 22일 열리는 SCM 참석을 위해 방한할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여러 중요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한은 미국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병력 증강배치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우리 정부도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군(軍)이나 경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아프간 지원 문제가 협의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나. 한·일 관계

● 원·엔 통화스와프 3개월 추가연장(10/16)

-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맺은 원·엔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일을 10월 30일에서 내년 2월1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힘. 한은은 지난 3월31일 4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이 조치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번에 만기를 2월1일로 정한 것은 한·미 통화스와프 및 미·일 통화스와프의 만기일과 맞추는



‘국제공조’의 차원이라고 한은은 설명함.

- 한은 관계자는 “현재까지 원·엔 스와프 사용 실적은 없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을 연장했다”며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함. 한은과 일본 은행은 이에 따라 만기까지 평상시 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와 엔화를 맞교환할 수 있으며, 위기 시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에 따라 100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 日 공안위원장 납치문제 협의 방안(10/16)

-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治) 공안위원장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에서 납치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북한에 있는 납치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이달 22일께 한국을 방문한다는 계획 아래 한국 정부와 협의중임.
-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한국에 망명한 북한의 황장엽 전 노동당 서기를 일본 국회에 초청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협조도 요청할 예정임. 일본 정부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 19명 중 귀국자들을 제외한 12명에 대해 즉시 귀국시킬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음.

다. 미·중 관계

● <원자바오, 詩句로 中-美관계 회고>(10/13)

-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달빛이 수려한 산림을 비추고 있네(却顧所來徑, 蒼蒼橫翠微)”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2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백의 시구를 인용, 30여년간의 중-미 관계를 이같이 표현함.
- 원 총리는 이어 양국관계는 “서로 협력하면 서로 유익했고, 다투면 서로 상처가 났고, 서로 믿으면 진보했고 불신하면 후퇴했다(合則兩利, 鬪則俱傷, 互信則進, 猜忌則退)”라는 16자로 정리하면서 상호 협력과 공존을 강조함. 원 총리는 이날 권력의 중심부인 중난하이(中南海)내 쑤광거(紫光閣)에서 개최된 중-미 제2선 고위층 대화를 마치고 나올때 비가 내리자 키신저를 위해 우산을 받쳐주고 배웅하는 깃듯한 예의를 보였음.
- 키신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윌리엄 전 국방장관, 스태플턴 전 주중대사 등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은 이날 쑤광거에서 탕자쑤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전직 고위관리들과 미-중 제2선 고위관리 대화를 함.



라. 미·일 관계

● “美 APEC 강화..日 동아시아공동체 견제”(10/16)

- 미국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표방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대신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아시아 지역의 대표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15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커트 통 미 국무부 APEC 담당 고위 관리는 지난 14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통합을 미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 이런 입장은 그동안 미국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아시아 중시 노선에 대한 경계감이 일어왔다는 점에서 주목됨.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를 전후해 아시아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가 두드러지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미국측은 또 서면답변을 통해 아시아 협력의 틀이 “급증해 왔다”면서 “아시아 다국간 협력 노력은 지지하지만, 미국은 모든 조직에 참가할 생각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거리감을 분명히 함. 그러면서 “실패를 생각하면 실효적인 지역경제 기구가 되려면 태평양 양측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경제통합에 건설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계함.
-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는 하토야마 총리의 외교 노선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경계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짐. 미일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이달 초 “동아시아 공동체에 미국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밝힌 이후 미국 정부는 주미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불쾌감을 표시함.

● 日, 美에 인도양급유 중단 방침 전달(10/15)

- 미국을 방문중인 일본 방위성의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정무관이 아프가니스탄 연합군에 대한 인도양 급유를 중단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5일 보도함.
- 나가시마 정무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 기자회견에서 미 백악관의 제임스 존스 안보보좌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아프가니스탄 연합군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를 시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에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힘.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나가시마 정무관이 전함.
- 그동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



也) 외상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인도양 급유를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런 방침을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일본이 지난 2001년부터 대 테러전쟁에서 미국을 돕기위해 시작한 인도양 급유를 미국 측의 계속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단키로 함으로써 향후 미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일본은 인도양 급유를 중단하는 대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민생지원 방안을 찾고 있음. 나가시마 정무관은 일본 주둔 미군 재편의 핵심인 오키나와(沖繩)현의 미군 기지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함.
- 나가시마 정무관은 이달 20일로 예정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다음 달에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의제와 일정 등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함.

● 美·日, 워싱턴서 북핵 협의(10/15)

- 미국과 일본은 15일 워싱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이틀간의 협의에 들어감.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미국 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사이키 국장이 16일까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북핵특사,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 등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힘.
- 우드 부대변인은 “이번 협의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한 2005년 (9.19) 공동성명 하에서의 국제적 의무를 북한이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되는 협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그는 캠벨 차관보의 일본 방문 직후 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재협의를 벌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새로운 것은 없다”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갖는 것이 드문 것은 아니다”고 답함. 그는 또 이달말 미국 방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리 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에 대한 비자가 발급됐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 美 “오키나와 기지이전 기존계획이 현실적”(10/12)

- 미국이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자민당 정권이 세웠던 기존 계획이 현실적이라고 밝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추진중인 오키나와 밖으로의 이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현지언론이 12일 보도함.
- 일본을 방문중인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방위성의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정무관과의 회담에서 오키나와의 미군 비행장인 후텐바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기존의 이전 계획이 현실적이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나가지마 정무관은 “오키나와 기지 이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위를 검증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힘. 그는 “기지이전 문제가 미·일 동맹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양국의 정권이 바뀔 만큼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고 전함.

마. 미·러 관계

● 美, 러에 핵시설 사찰 허용 용의(10/15)

- 러시아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러시아 라디오 방송 ‘에코 모스크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 내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14일 밝혔다고 dpa 통신이 15일 전함.
- 힐러리 장관은 미·러 양국이 오는 12월 만료되는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1)을 대체할 후속 협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미국 핵시설 사찰을 포함한 양국간 무기사찰안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새 조약이 제때에 발효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클린턴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START-1 대체 협약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러시아군 및 러시아 정부가 제기하는 모든 의문에 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군축 협상에 최대한 ‘투명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폭스뉴스가 전함.
- 클린턴 장관은 또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 미국 역시 이란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힘. 그녀는 “우리는 이러한 해법을 매우 열정적으로 추구 하면서, 이러한 해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에 대비해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클린턴 “미-러 냉전시대 사고 극복해야”(10/14)

- 러시아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미국과 러시아의 일부 관료들이 냉전시대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힘. 그는 또 러시아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공격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이에 대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함.
- 클린턴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열린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양국 정부 내에 여전히 과거 속에서 살면서 한때 적이었던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역설함. 그는 이어 러시아의 변명은 정치 프로세스에 참여할 자유를 포함, 핵심적인 자유를 기꺼이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인권문제



에 대해서도 언급함.

- 클린턴 장관은 혁신적인 사회에서는 국민이 틀에 박힌 지식을 거부하고 통용되는 관습과 권위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지녀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언론인과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함. 클린턴 장관은 또 미국과 러시아가 향후 합동 미사일 방어 계획을 발표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핵으로 무장한 과격 단체들의 공격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합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클린턴 장관은 이날 학생들과의 토론에 앞서 모스크바 대학 캠퍼스 내 미국 시인 월트 휘트먼 동상 제막식에 참석함. 그는 “푸시킨과 휘트먼이 시를 바꿔 놓은 것처럼 우리도 21세기 우리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고 말함.

바. 중·러 관계

● 후진타오 “러시아와 더 큰 프로젝트 원해”(10/15)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에게 러시아와 경제, 무역 분야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밝힘. 중국 국영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후 주석은 푸틴 총리를 출국하기 전에 만나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측과 국제정치, 경제, 안보, 기타 여러 영역에서 협의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한 뒤 이같이 말함. 후 주석은 더 큰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음.
- 이에 푸틴 총리는 “우리는 양국관계의 진전에 대해 만족하며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함. 중국과 러시아는 푸틴의 방중기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하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때 상대국에 사전통보하는 내용의 협정도 맺음.

● 중·러 총리, 35억달러 협정체결(10/13)

- 중국 방문 이틀째를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13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정례 회담을 갖고 양국간 35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함.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한 푸틴 총리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주최한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원 총리와 14번째 양국 총리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방안과 국제 및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함.
- 원 총리는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양국 총리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면서 북한이 단거



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푸틴 총리를 수행해 방중한 러시아 기업인들은 이날 중국 측과 총 35억달러 규모의 협정 및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는 중국 개발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간 5억달러 규모의 차관 계약을 비롯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의 매년 700억m³의 가스 중국 공급계약, 교통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원 개발 등의 공동 프로젝트 등이 포함돼 있음. 또 탄도 미사일 발사 통고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포함해 이민에 관한 협정, 비즈니스 거래와 '고속열차를 이용한 러시아 여행' 등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음.
- 원 총리와 푸틴 총리는 이날 회담이 끝난 뒤 협정 조인식에 참석해 기업인들이 체결한 계약을 승인하고 정부간의 협정에도 서명함. 외신들은 당초 양국이 푸틴 총리의 방중 기간 총 34개 분야, 55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보도했으나 협정의 규모는 당초 보다는 줄어든 35억달러로 결정됐음.
- 양국 총리는 이날 저녁 회담이 끝난 뒤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기념행사와 중국에서 진행된 '러시아어의 해' 행사 폐막식에도 함께 참석함. 양국 총리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임. 이번 회담에는 중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 회원국과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 등 4개 옵서버 국가, 초청국인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참가함. 이번 회의는 회원국간의 경제와 사회·문화 협력 방안과 함께 대테러 공조 방안, 국제범죄 조직 척결 등 안보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사. 기타

● 日 '복지공약은 성역'..예산 딜레마(10/16)

-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소요로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고민에 빠짐.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약 95조엔에 달하고 있음. 이는 올해 당초예산 88조5천억엔을 6조5천억엔 상회하는 사상 최대 규모임. 예산 요구액이 이처럼 불어난 것은 하토야마 정부의 '성역'인 각종 복지공약 관련 예산이 더해졌기 때문임.
- 내년에 새롭게 편성될 복지예산은 자녀수당 2조2천500억엔, 고교수업료 무상화 4천500억엔, 고속도로무료화 6천억엔, 쌀 가구별 소득보상제 3천400억엔 등 모두 7조1천억엔임. 문제는 돈을 쓸곳은 많은데 수입(세수)이 변변치않다는 데 있음. 올해 세수는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40조엔을 밑돌 것으로 예상됨. 이는 당초 예상했던 46조엔에 비해 6조엔 이상이 적음. 세수가 40조엔을 하회할 경우 1985년(38조2천억엔) 이후 24년만에 최저 수준임.



-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7조1천억엔과 줄어드는 세수 6조엔을 합하면 13조1천억엔. 이 돈을 어디선가 염출해야 내년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만 뽀족수가 없다는 점이 하토야마 총리의 머리를 아프게하고 있음. 올해 추가경정예산 14조7천억엔 가운데 2조9천259억엔을 삭감해 놓고 있으나 대부분을 2차 추경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내년 복지예산으로 돌릴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을 보임.
- 하토야마 총리는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복지 예산을 제외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임. 하지만 공공사업 지출을 대폭 줄일 경우 그렇지 않아도 비틀거리는 경제에 타격이 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장래에 큰 부담이 됨. 일본은 이미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44조엔의 국채를 발행해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최악의 수준임.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댐과 도로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는 등 공공사업비 삭감에 나섰지만 이는 경기부양에 독임.
- 이 때문에 내년 봄 다시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이른바 ‘하토야마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국민들이 기대하는 복지공약을 소홀히 할 경우 하토야마 정부의 입지가 없어짐. 그렇다고 복지공약을 밀어붙이면 재정이 누더기가 되고 단기적인 경기대책 수단을 잃게 됨. 70%대의 높은 국민 지지율을 업고 있는 하토야마 총리이지만 예산 딜레마에 봉착해 고심이 커지고 있음.

● 中총리, 이란과 긴밀한 협력 강조(10/16)

-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5일 핵개발 문제로 서방국가들로부터 집중타를 맞고 있는 이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원 총리는 이날 중앙아시아 국가 포럼 참석차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중국의 국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그는 중국은 이란과 “고위급 접촉을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도 약속함. 원 총리는 또 “중국과 이란 양국 관계는 급속한 발전을 기해왔으며, 교역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한층 확대됐다”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전함.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란에 핵계획 투명성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원 총리의 언급은 중국이 서방의 요구에 동조함으로써 이란과 에너지 및 투자 관계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됨.
-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 총리와 라히미 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이 중국과 경제·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는 라히미 부통령의 발언이 있었음을 소개함.



- 중국은 이란이 최근 제2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혀 서방측으로 부터 한층 더 비난을 사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세계 제2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원유 가운데 이란산은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 한·중·일,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추진(10/16)

- 한·중·일 3국이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란 상호 학점인정과 공동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내 대학생 150만명이 역내 타국가에서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얻을 수 있는 학생교류 프로그램임. 한·중·일 3국 정상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함.
- 이에 따라 3국은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점교류를 추진할 ‘한·중·일 고등교육 교류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우리 정부가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라는 명칭을 붙인 이 프로그램에는 대학간 학점교류, 공동학위 수여, 학생·교직원 교류 등 다양한 대학교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
- 외교부 관계자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는 3국 중심의 독자 프로그램을 검토중”이라며 “한·중·일 대학생의 이동성을 증대함으로써 아시아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한-EU FTA 가서명..내년 1분기 정식서명(10/15)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이 이뤄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오전(현지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EU 집행위 본부에서 FTA 협정문에 가서명함.
- 아직 정식서명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대서양 양안의 거대 경제권인 미국, EU와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외교역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동력’을 얻게 됐을 뿐 아니라 경제적 위상 제고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됨. 또 적극적으로 역외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해 온 EU 입장에서 주요 선진 20개국(G20) 멤버인 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자유무역 선도자’로서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라운드 협상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게 됨.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가 발효되면 양자 교역 및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이며 EU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약 16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에 거대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함. 애슈턴 집행위원도 "EU가 21세기 들어 체결한 첫 FTA이자 경제 선진국과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는 협정"이라고 평가하고 "FTA 체결로 서비스, 제조업, 농업 분야의 유럽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함.

-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함.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됨. 이날 가서명된 한-EU FTA 협정문은 본문 400쪽을 비롯해 총 1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EU 측에서는 3~4개월 가량 영어를 제외한 21개 언어로 번역됨.
- 외교통상부는 오는 19일 협정문 영어본과 설명자료를 외교통상부 FT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미 번역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협정문 한글본도 내달 초 공개할 방침임. 양측은 번역작업이 완료된 협정문에 내년 1분기, 늦어도 4월 이전에 정식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께 발효시킨다는 목표 아래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 1~2월 중, 늦어도 3~4월에는 정식서명을 하고 상반기를 전후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국내에서는 협정문 정식서명 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승인되고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하면 협정 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됨. EU에서도 정식서명 이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함.

● “케냐, 中과 자원수송로 건설 협상중” <FT> (10/15)

- 케냐 정부가 수단의 석유자원 수송을 담당할 수송로 및 항구 건설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함. 자원확보를 위해 최근 아프리카 각국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이를 통해 남수단의 석유자원을 공급받을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케냐 정부는 지난해 말 카타르 정부와 4만ha의 토지를 임대해주는 대신 35억달러 규모의 항구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무산됨. 라일라 오딩가 총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항구 및 수송로 건설을 위한 협상안을 제안했다”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은행 및 건설사들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이는 케냐 남부의 라무 항구 건설 및 이로부터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을 잇는 연계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임.
- 중국이 케냐의 기간시설 건설에 주목한 것은 케냐가 보유한 자원보



다 수단이 보유한 석유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FT는 전함. 중국의 3대 국영 에너지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이달 말까지 케냐 북부에서 유전개발사업 등의 시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케냐의 에너지부가 금주 밝힘.

- 중국은 또한 라무 분지 지역에 대한 탐사권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해짐. 케냐 정부는 중국 이외의 다른 당사자와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케냐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협상을 요청해 온 쪽은 수단이라고 말함.

● 中, 대만에 군사 상호신뢰 구축 촉구(10/15)

- 중국은 14일 대만이 대륙의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대만에 군사적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교류를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함. 판리칭(范麗靑)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관 공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양안간 군사적 상호 신뢰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한 군사교류의 강화를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국 영자지 글로벌 차임스가 15일 보도함.
- 판 대변인은 이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13일 대만 남부 핑둥(屏東)현 주평(九朋) 미사일 발사기지에서 실시된 미사일 발사실험을 참관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대만 연합보(聯合報)에 따르면 대만은 13일 주평에서 ▲사거리가 600km에 달해 상하이를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순항 미사일 ‘승핑(雄風) 2E’ ▲초음속 대함 미사일 ‘승핑 3’ ▲지대공 미사일 ‘스카이보우 3’ 등 3 유형의 미사일을 실험발사함. 대만의 이번 시험발사는 중국이 지난 1일 건국 60주년 기념 국경절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최첨단 무기를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한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 베트남대사 “韓-베트남 전략적관계 격상 계기”(10/15)

- 팜 띠엔 반 주한 베트남 대사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이 “양국 관계의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이 장기적 안목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데 합의할 것”이라고 말함. 반 대사는 이 대통령의 이달 20~22일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국간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협력관계를 심화 내지 확대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그는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과 관련,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가 한국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반 대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문제에 대해 “베트남은 2020년까지 국가 공업화를 실행하는 목표를 세웠고 그런 목표를 향해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 우수한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는 이어 “앞으로 10년 동안 6천km 이상의 고속도로 건설계획, 북과 남을 연결하는 1천700km의 장거리 고속철도 개발계획, 그리고 새로운 항만 시설과 공항, 수력·화력·원자력 발전소와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함.
- 반 대사는 “예를 들어 우리는 하노이시와 호찌민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을 처음부터 일본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앞으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 북핵 문제와 관련, 반 대사는 “북한의 핵개발은 역내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게 세계의 공통된 입장이며 베트남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적으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며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면 어느 대화형식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베트남 전쟁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됨으로써 양국간 갈등요인으로 부상한 것에 대해 반 대사는 “베트남 전쟁 참전을 미화하는 방향에서 일이 처리되면 베트남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옛날 상처를 다시 아프게 하는 일”이라며 “한국 측이 이 문제가 양국 관계와 베트남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함. 그는 “베트남 전쟁은 우리로서는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고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가로막은 전쟁”이라며 “그래서 과거 한국이 전쟁에 참전해 베트남에 피해를 줬음에도 우리는 과거를 접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의 문제를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고 양국관계의 발전과 한국의 이미지, 한국 사람에 대한 인적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함.

● 中 외환보유액 2조2천억弗..사상최대(10/14)

- 세계 최대 외화보유국인 중국은 9월 말 기준 외화보유액이 2조2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14일 밝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월 말 2조1천300억달러였던 외화보유액이 7~9월 약 1천410억달러 더 증가해 2조2천7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이는 2위인 일본의 외화보유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액수임. 중국 외화보유고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자산가격 급증과 경제회복으로 인한 투자금 유입 때문으로 분석됨.
- 인민은행은 막대한 무역 흑자와 투자 유입금으로 달러를 사들임에



따라 외화보유액을 급증시킴. 또한 중국의 경제회복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상승은 외화를 중국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처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상하이협력기구 폐막..“경제협력 강화”(10/14)

- 역내 안보·경제 협력을 위해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제8차 총리회담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원국 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등에 합의한 뒤 폐막함. 이번 회담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 회원국과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 등 4개 옵서버 국가, 초청국인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총리와 부통령, 외교장관 등이 참가함.
- 이번 회담에서 각국 총리들은 전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함. 구체적으로는 회원국들은 각국 간 교통과 통신망 구축을 추진키로 하고 연내에 카자흐스탄에서 무역 확대와 회원국의 통화를 사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재정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의 개최를 추진키로 함.
- 각국 총리들은 협력기구 사무국과 이사회의 2010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2009년 역내 테러방지 기구에 예산을 일부 배정해 테러 대응 문제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함. 또 총리들은 회원국 간 관세분야의 공무원을 공동으로 교육시키는 내용의 의정서에도 서명함. 총리들은 회담이 끝난 뒤 이 같은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 회담을 주재한 원자바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회원국 간 경제협력과 금융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SCO내에서 경제발전 관리시스템을 수립해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함. 원 총리는 이어 “재정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환경 개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계좌 개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면서 “기초설비 건설, 통관업무 효율성 제고, 유통망 개선, 상품 안전문제 등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푸틴 총리는 회원국들이 사법부 등 법집행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통신, 물류, 기초설비, 에너지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테러, 분리주의, 극단주의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위협받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안보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9년째를 맞는 SCO의 향후 발전 방안 등도 논의함. 차기 회담은 키르기스스탄에서 2010년 열릴 예정임.

● 제4차 양안회담 12월 대만 개최(10/14)

- 중국과 대만은 오는 12월 대만 타이중(臺中)에서 제4차 양안(兩岸) 회담을 갖고 농어업 협력과 투자보호 문제 등을 논의함.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14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해협양안



관계협회(해협회) 정리중(鄭立中) 부회장과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가오쿵롄(高孔廉) 부이사장이 전날 항저우(杭州)에서 만나 12월 중하순 타이중에서 해협회와 해기회간 제4차 양안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제4차 회담에서 양측은 농업과 어업 협력, 표준화 문제, 중복과세 방지 문제, 양측 투자보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관련 협정에 서명할 예정임. 이에 앞서 양측은 11월 초 양안 간 농어업수리협력 교류회를 출범시켜 상하이(上海)와 저장(浙江)성 등에서 농어촌 시찰 등을 진행함. 12월 회담에서 양측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에 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판리칭(范麗靑)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회견에서 “양안간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모두 끝났다”면서 “양측의 별도 연구 모두 이 협정이 양안 국민의 이익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함. 지난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지금까지 3번 열린 양안회담을 통해 중국과 대만은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신(通信)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대삼통(大三通)’ 시대를 열었고 지난 5월부터는 중국 기업의 대만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한·세이셸 정상회담..경제협력 합의(10/14)

-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제임스 알릭스 미셸 세이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함.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향후 세이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과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으며, 이에 미셸 대통령은 세이셸의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뒤 자국내 관광업 및 수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요청함.
- 이어 미셸 대통령은 “초청하고 환대해 준 데 감사한다. 내년에 값은 기회를 달라”고 초청 의사를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내년에 아프리카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세이셸에 한번 들르겠다”고 답함. 또 미셸 대통령은 “우리 어민들이 해적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 해군이 소말리아 인근에서 해적퇴치 작업을 벌여주고 있어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한국 해군함정이 세이셸 항구에 기항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전함.
- 세이셸은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인구 8만7천명의 도서국가로 우리나라와는 지난 1976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1980년 광주민중화운동 탄압을 이유로 단교한 뒤 1995년 복교한 바 있음.



● **李대통령, 20~25일 동남아3국 순방(10/14)**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0~25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3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발표함.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이튿날인 21일 응웬 밉 쩌엣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진 뒤 농 득 마잉 당 서기장, 응웬 쩌 쑤 총리 등과 면담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자원·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이어 이 대통령은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을 예방한 뒤 훈 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광물자원 공동연구, 양국간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 등에 합의할 예정임. 이 대통령은 또 오는 24~25일 태국 후아히에서 열리는 한·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도 참석해 올초 천명한 ‘신(新) 아시아 외교구상’을 설명하고 북핵문제 공조,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계획임.
-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신아시아 외교의 중심축인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실질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역내 주요 지도자들과 친분을 강화하고 당면한 국제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 <日 민주당 외교정책은 ‘新아시아주의’>(10/14)

- 오는 16일 출범 한 달을 맞는 일본 민주당 정부는 외교정책 면에서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음. 이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3일 이를 ‘신 아시아주의(New Asianism)’로 명명하고 일본 외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함.
- 잡지는 민주당 정부의 ‘신 아시아주의’는 “미국과 좀 더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만들면서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 및 한국과의 유대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함. 이 잡지는 이러한 외교정책 기조가 지난 10일 한·중·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잘 나타났다면 이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등 과거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함.
- FP는 일본 외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세 가지 주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힘. 우선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말한 것처럼 미일 동맹이 여전히 일본 외교정책의 ‘기초(cornerstone)’라는 것임. 현실적으로 일본과 미국은 중국과 세력균형을 맞추고 무역과 환경 등 국제적인 이슈에서 신뢰받는 강대국이



되려면 서로 필요하며,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없이 북핵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고 잡지는 설명함.

- 둘째 요소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지역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임. 이는 EU의 초기단계를 모델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으로 나타남.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에서 동아시아 공동체가 장기적으로는 유로화와 같은 화폐를 아시아 지역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낭만적인’ 생각을 피력했다고 잡지는 전함.
- 세 번째로 민주당의 외교정책 변화는 역사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는 것임. 하토야마 총리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전범들을 분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잡지는 전함.
- FP는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일본의 외교정책 변화를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동맹관계를 재편하는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 65% “<아사히>(10/14)

- 정권 출범 한 달을 맞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65%로 조사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함. 아사히신문이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전국 성인 2천5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65%로 나타남. 이는 이 신문이 하토야마 정권 출범 당시인 지난달 16~17일 조사했을 때의 71%,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이달초 조사 때의 71%에 비해 다소 낮아진 지지율임.
- 최근 한 달 간의 내각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75%가 ‘크게 평가’(63%), ‘어느 정도 평가’(12%) 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개별 정책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4조7천억엔에서 3조엔 가까이를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돌린데 대해 ‘크게 평가’(23%), ‘어느 정도 평가’(50%)로 73%가 지지함.
-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삭감하는 지구온난화방지대책은 국민의 72%가 지지해 하토야마 총리의 어깨를 가볍게 함. 논란이 되고 있는 군마(群馬)현의 안바담 건설중단에 대해서는 44%가 찬성한 반면 31%는 반대함.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48%, 반대가 41%로 팽팽함.

● <日정권교체 한달> 기대 커진 한일관계(10/14)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내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교에서도 과거 정권과는 다른 색깔을 내고 있음. 전통적으로 일본은 서방 중시, 미국 중시의 외교정책에 철저함. 아시아 외교는 대미 외교의 종속변수에 불과함.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는 과거사 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음.



-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는 대미 편중외교 시정과 ‘아시아 중시’를 전면
에 내걸고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음. 아시아 지역과는 서로를 존중하
고 친하게 지낸다는 ‘우애(友愛)’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 창설
을 내세우고 있음. 이에 대해 아시아 각국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임. 경제 협력은 물론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기대감에서임.
- 반면 미국은 떨떠름한 표정임. 일본이 미일 지위협정 개정 등을 추진
하고 있는데다 ‘동아시아공동체’에서도 배제되는 쪽으로 흐르는 등
일본의 독자행동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임.
- ◇ **의욕적인 동아시아공동체:**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이후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 동아시아공동체는 한마디
로 아시아 각국이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 각계약진에서 벗어나 유
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상호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임.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성국으로 한·중·일과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동아시아공동체는 일본의 절박한 경제현실을 바탕으로 깔고 있음. 작
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한국
과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생명 줄이 되고 있음.
특히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임. 올해 상반기 일본의 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중국이 17.9%로 미국(15.8%)과 유럽(12.6%)을 크게 앞
섬. 일본은 현재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
면 조만간 중국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음.
- 결국 일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은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음. 일본으로서는 동아시아공동체
가 구호나 제스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이후 정상회담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고,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구상을 세일즈함. 하
토야마 총리는 그 첫걸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정치적 차
원으로 격상하고 3국의 투자협정을 내년에 성립시키자는 제안을 함
- 이에 대해 일본과 주도권 경쟁을 해야하는 중국은 시큰둥해하고 있
지만 이미 하토야마와 비슷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는 한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임. 아시아를 경시했던 일본이 잘해
보자고 손을 내미는데 굳이 뿌리칠 이유는 없기 때문임. 문제는 일
본의 진정성임. 동아시아공동체가 포장만 바꾼 ‘대동아공영론’이 아
니냐는 의구심도 있음. 일본에 침략과 수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
시아 각국은 진정성의 징표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
죄와 보상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음.
- ◇ **한·일관계 청신호..결과는 미지수:** 이런 흐름 속에서 한일 관계
역시 자민당 정권에 비해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하토야마
는 취임이후 첫 정상회담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우애’를 과시함. 한
국에 가장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무라야마 담화를 가슴에 안고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말함. 재일 한



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미래 한·중·일 3국의 공통 역사교과서 제작의 필요성을 언급함. 역대 일본 총리나 장관들이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했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하토야마 정부의 각료들은 참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별도의 국가 추도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함.
- 일본 정부의 이런 자세는 분명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과거 자민당 정권과 차별화됨.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의 ‘실천력’이 받쳐줄지는 미지수임. 하토야마 총리는 방한 당시 과거사 문제 청산 등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 국민의 정서와 감정, 이해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비켜나감.
- 이에 따라 과거사나 영토 문제 등의 해결에 대한 한국의 기대가 너무 크게 부풀어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음. 일본 국내 현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간단치않기 때문임.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일본 야마구치(山口)현립대 교수는 “솔직히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일본, 이른바 ‘뉴 재팬’에 대한 기대가 한국에서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섬. 부풀어진 풍선은 터지기 쉽다. 멀고 높게까지 날려 보내기 위해서는 천천히 부는 것이 적당하지 아닐까 싶다”고 말함.
-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일본의 실질적 노력도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임.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려 300억 달러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임.
- ◇ **대미 관계..하토야마 외교력 시험대:** 하토야마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과거 외교의 중심축인 미국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있음. 겉으로는 대미 외교가 일본 외교의 뼈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 제기’, ‘일본 주둔 미군 재편문제 재검토’ 등에 대해 후퇴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는 시한인 내년 1월 이후 중단키로 방침을 정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민생지원 방안을 세우고 있음. 하토야마 총리는 ‘미·일 대등외교’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지난달 유엔총회 때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신뢰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으나 미국 조야의 경계감은 누그러뜨리지 못함.
- 오히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 미국을 사실상 제외하면서 미국 정치권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음. 하토야마 총리는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적인 대미 외교의 재구축을 시도한다는 구상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함. 일본 내부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하토야마 총리에게는 부담임.



● <日정권교체 한달> 일본이 변했다(10/14)

- 일본에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출범한지 16일로 한 달을 맞음. 새 정권 출범후 일본의 구석구석에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음. 변화는 특히 정치와 경제, 외교, 통치 스타일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전후 54년간 지속된 자민당 1당 지배의 때를 벗고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임.
- 일본 국민은 70%대의 높은 지지로 하토야마 정부를 응원하고 있음. 세계 각국도 대부분 '우애(友愛)와 환경'을 앞세운 일본의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음.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의 구호가 실천과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국민들은 금방 싫증을 내고 세계의 시선은 싸늘해질 것임.
- 변화와 개혁에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따름. 정책에도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련임. 이를 제어하고 극복하는 힘은 정치력임. 이제 하토야마의 정치력에 대한 엄혹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음.
- ◇ **관료 배제 정치주도 현실화:** 하토야마 정부는 관료정치 타파를 1순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음. 각종 정책 결정 라인에서 관료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치인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음. 역대 자민당 정부에서는 관료들이 사실상 국정을 지배함. 정치인들은 관료들이 차려준 밥상에서 수저만 들 뿐이었음.
- 관료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 보신과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됨. 이렇다 보니 정치가 국민의 실생활에서 유리되고 결국 자민당의 몰락을 초래함. 하토야마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과거 정권에서 정책 결정권을 사실상 행사했던 사무차관(관료)회의를 폐지하고 현역 정치인인 각 부처의 장관과 부대신, 정무관 등 이른바 '정무 3역'이 정책을 결정하도록 함.
- 공무원들에게는 기자회견도 금지함. 국민의 가려운 곳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자는 취지임. 공무원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정치인들이 대신하면서 정책 설명 부족에 따른 언론의 반발도 빚어지고 있지만 하토야마 정부는 당초 제시한 원칙대로 밀어붙이고 있음.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朗) 민주당 간사장은 국회에서 공무원의 답변을 금지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음.
- ◇ **예산·복지서 정권교체 실감:** 관료 배제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예산임. 하토야마 정부는 자민당 정권이 만들어놓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복지 위주로 방향을 틀어 다시 짤. 14조 7천억엔의 추경예산에서 3조엔을 털어내 내년에 지급할 자녀수당 등 복지예산으로 돌림. 하토야마 정부는 이 예산으로 내년 6월부터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월 1만3천엔을 현찰로 지급하고 2011년부터는 이를 월 2만6천엔으로 늘릴 방침임. 부처별로 쓸 곳이 이미 정해진 추경예산에서 복지예산을 염출하는 작업은 부처 이기주의에 물든 공무원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었음. 각 부처의 정무 3역이 불



- 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직접 칼질을 함.
- 예산 삭감은 가장 젊은 장관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이 총대를 댔음. 복지예산 염출이 여의치않자 마에하라 교통상은 국가가 시행하는 전국 56개 댐 사업장 가운데 48개 댐 공사와 4차선 도로 확장 6개 구간의 공사를 한꺼번에 중단하는 충격요법을 씀. 시급성도 없이 지역 민원에 끌려 콘크리트(댐)와 아스팔트(도로)에 퍼부어지는 혈세를 국민들에게 수당으로 돌리겠다는 것임.
 - 같은 관점에서 세수가 연간 2조5천억엔 달하는 휘발유 등의 잠정세율을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고 고속도로 무료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국민부담을 덜어주기로 함. 환경대책에서도 혁신적임. 하토야마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달 하순 유엔 총회에서 국제 공약화함. 전 정권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자민당 정부는 1990년대비 8% 감축을 정책화했으나 이를 뒤집고 예상외의 강력한 삭감 계획을 제시해 세계를 놀라게함.
 - ◇ **의욕 과잉..하토야마 불황 우려:** 하지만 하토야마식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역풍도 불고 있음. 우선 지적되는 것이 경제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임. 일본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쇼크에서 탈출하고 있으나 회복속도는 미미함.
 - 실업률은 5.5%(8월)로 높은 수준이고 물가는 -2.4%(8월)로 4개월째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음. 경제 성장률은 올해 -5.4%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임.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는 막연하게 수요진작을 통한 성장론만 되풀이할 뿐 적정 성장을 담보할 경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복지와 고용정책을 위해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 세금이 견혀야 하지만 올해 일본은 6조엔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에 이미 편성됐던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성장률이 더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이른바 하토야마 불황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음.
 -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의 기우치 타카히데(木内登英)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간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소득 분배를 통한 소비부양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면서 "오히려 공공투자 억제, 엔고 용인 등으로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걸쳐 이중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내년 1~3월 성장률은 소폭 마이너스가 예상된다"고 말함.
 - 여론을 살피지않은 일방적 정책 결정도 문제가 되고 있음. 군마(群馬)현의 안바댐 공사 중단이 대표적임. 이 댐 공사는 시행전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총공사비 4천600억엔(한화 약 6조원) 가운데 3천217억엔(한화 약 4조2천억엔)이 투입돼 주민 이주와 댐 건설에 대비한 주변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수몰 주민 70%와 이해가 걸린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 중단에 반대하고 있음. 당장 국회가 열리면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정치 쟁점화하겠다고 버르고 있음.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5%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면밀한 여론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국제공약화해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印-中 분쟁지역 놓고 또 신경전>

- 인도와 중국이 분쟁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이번에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선거 유세를 위해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방문한 것이 화근이 됐음.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싱 총리가 지난 3일 여당인 국민회의당의 지방 선거운동 지원차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섬.
-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심대한 우려를 무시한 (싱 총리의) 분쟁 지역 방문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인도가 중국의 우려를 감안해 분쟁지역에서 불안을 조성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최근 잇따른 중국 인민해방군의 국경 침범에 대해 언론을 진정시켜왔던 인도 정부도 중국 측이 공식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발끈하고 나섬.
- S.M. 크리시나 인도 외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루나찰 프라데시가 인도의 일부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함. 비슈누 프라카시 외무부 차관도 성명을 통해 “우리 총리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방문을 반대하는 중국 측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며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인도의 영토이며 이는 중국도 잘 아는 사실이다”고 논평함. 그는 이어 “중국의 성명은 양국 간에 진행 중인 국경 회담의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 중국과 인도는 1962년 히말라야 산맥 국경선을 놓고 전쟁을 치른 이후 40년 넘게 영토분쟁을 벌여왔음. 인도는 중국이 자국 영토인 카슈미르지역 3만 8천km²를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9만km²가 자국 영토라고 반박해옴. 지난 2007년 말 첫 양국 합동군사훈련에 이어 이듬해 1월 싱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가운데, 양국은 국경 회담도 재개했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함.



[참고 1]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연합뉴스, 10/12)

- 북한이 12일 동해안에서 KN-02 지대지 미사일 5발을 발사했음.
- 이번 발사는 지난 7월4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스커드미사일 5발과 노동미사일 2발에 이어 3개월여 만임.

다음은 2003년 이후 발사된 장거리 로켓과 미사일 일지.

- ▲2003. 2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발사.
- ▲2003. 3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발사.
- ▲2003. 4 = 서해상에서 육지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 ▲2003.10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미사일 발사.
- ▲2005. 5 =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
- ▲2006. 3 =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기 발사(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의 개량형인 KN-02과 유사형).
- ▲2006.7. 5 = 대포동 2호 1기를 비롯 노동 및 스커드급 등 총 7발 발사.
- ▲2007.5.25 =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 ▲2007.6. 7 = 서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 ▲2007.6.19 =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 ▲2007.6.27 = 동해상으로 KN-02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 ▲2008.3.28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
- ▲2008.5.31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 ▲2008.10.8 = 서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 ▲2009. 4. 5 = 北, 오전 11시30분 15초 장거리 로켓 1발 발사.
- ▲2009.5.25 = 함경북도 무수단리, 지대함 단거리 2발 발사.
- ▲2009.5.26 = 함경남도 신상리, 지대함 단거리 3발 발사.
- ▲2009.5.29 = 함경북도 무수단리, 신형 지대공미사일 1발 발사.
- ▲2009. 7. 2 = 함경남도 신상리, 지대함 단거리 4발 발사.
- ▲2009. 7. 4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단거리 7발 발사(스커드 5발.노동 2발 추정).
- ▲2009.10.12 = 동해안서 KN-02 단거리미사일 5발 발사.

threek@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12/0511000000AKR20091012214400043>.
HTML



[참고 2] <그래픽> 北 동해상 미사일 발사 (연합뉴스, 10/12)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이 12일 오전과 오후 동해안에서 사거리 120km의 KN-02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음.
- 최근(올해 5월 이후 기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



반종빈 기자 bjbjin@yna.co.kr / 20091012

출처(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1012001400044



[참고 3] <이명박 정부 남북회담 일지>(연합뉴스, 10/14)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남북은 14일 개성공단내 남북경협협의 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단은 지난달 6일 우리 국민 6명의 익사로 연결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방류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류시 상대방에 대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임진강의 공동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북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회담 일지.

◇2009년

- ▲4.21 =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당국간 접촉.
- ▲6.11 =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1차 당국간 실무회담.北, 임금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달러 요구.
- ▲6.19 =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2차 당국간 실무회담.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 밝힘.
- ▲7. 2 =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3차 당국간 실무회담·회담 파행.
- ▲8.23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21일 방남한 북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진 통일전선부장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면담.
- ▲8.26~28 =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 열어 추석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
- ▲9.26~10.1 = 금강산에서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 ▲10.14 = 개성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
- ▲10.16(예정) =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ksw08@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14/0511000000AKR20091014082300043>.
HTML



구분	내용
서비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개방. - 한·미 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하는 '코러스(KORUS)+플러스' 개방. - 미래 최혜국 대우(MFN) 적용. - 역진방지(래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미포함. - 영화·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
지적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못써. - 저작권 보호기간 한·미 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70년으로 연장. - 추급권 배제
분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 패널 구성해 협의. -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세이프가드는 분쟁해결절차 대상서제외.
위생·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 및 검역조치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협정의 권리와 의무 적용.
무역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무제한 보조금·부실기업 지원 보조금 금지.

(자료=외교통상부) (서울=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14/0503000000AKR20091014195000002.HTML>

[참고 6] <표> 한·EU FTA 공산품 관세 양허(연합뉴스, 10/15)

◇ 공산품 분야 관세 양허

양허단계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중	대EU 수입액 (억불)	비중	품목수	비중	대한국 수입액 (억불)	비중
즉시 철폐 (A)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3년 철폐 (B)	478	5.1%	58	22.4%	151	2.1%	68	16.6%
조기 철폐 (A+B)	9,013	95.8%	238	91.8%	7,352	99.4%	386	93.3%
5년 철폐	346	3.7%	18	6.9%	46	0.6%	28	6.7%
7년 철폐	45	0.5%	3	1.3%	-	-	-	-
총합계	9,404	100%	259	100%	7,398	100%	414	100%



◇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

	우리측	EU측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식물제외류(8~13),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직물(8), 진공청소기(2.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8), 철도차량(5), 철도차량부품(5), 선박용부품(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항공기(7.5~7.7), 기타신발(17),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밸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요업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모니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계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등	미사용

(자료=외교통상부) (서울=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14/0503000000AKR20091014183800002>
HTM